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성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57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1. 22.

발 의 자 : 김성주 · 강선우 · 고영인
김희재 · 남인순 · 송영길
송옥주 · 정필모 · 최중윤
허종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, 지원대상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직권신청이 꼭 필요함에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함.

또한,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거나, 보장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·제출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아울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·재산 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,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일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업무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심신미약·상실자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대상자가 평소에 자주 방문하는 기관 등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.

또한, 공적자료만으로 소득·재산 등을 조사한 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이면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대상자 조사·선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심신미약·심신상실 등 사실상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,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(안 제9조제3항).

나.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·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9조제4항)

다.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신청에 따른 조사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소득·재산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대

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1조제2항)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직권 신청한 사실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 법인·단체·시설·기관 등은 발급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까지에서”를 “제4항까지에서”로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여부 및 발급 유형을 결정할 때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·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발급대상자의 소득·재산 수준

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9조(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직권 신청한 사실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</u>
<u><신설></u>	<u>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된 법인·단체·시설·기관 등은 발급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.</u>
③ (생략)	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11조(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1조(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여부 및 발급 유형을 결</u>

<p>②・③ (생략)</p> <p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	<p><u>정할 때 제10조에 따라 제공받 은 자료·정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통해 평가한 발급대상자 의 소득·재산 수준이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 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 를 생략하고 사회서비스이용권 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 다.</u></p> <p>③・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)</p> <p>⑤ -----제4항까지에서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--	---